



20일 전남 여수 모처에서 '에너지·플랜트 분야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기후부

## 기후부, 민·관 '녹색산업협의체' 확대

'전략적 수주 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일 전남 여수에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14곳과 민간기업 12곳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기후부의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급증하는 전 세계 녹색 신산업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존 74개 기관이 참여하던 녹색산업 협의체는 '환경'에 국한돼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에너지와 플랜트, 전력계통 등 '녹색 신산업' 전반으로 확장됐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4곳이 참여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삼성중공업, 한화솔루션, HD일렉트릭, LS일렉트릭, 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HN 등의 대기업뿐 아니라 동반진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 도합 12개사가 참여한다.

새롭게 정비된 녹색산업 협의체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선다. 해외사업 발굴부터 협력망 구축,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략적 수주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서로 다른 산업군이 결합한 '묶음(패키지)형 수주' 경쟁력을 확보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여수 엑스포장과 오동도를 잇는 방파제 길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듯이 녹색산업 협의체가 우리 기업과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가장 단단한 가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중동發 석화 원료 수급 불안정 일회용품 저감... 자원순환 기회

수도권매립관리공, 기후부 추진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운동 동참  
폐기물 처리·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자원위기 대응 기반 마련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 자원순환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실천운동' 관련 동참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1회용 컵·페트병, 풍선, 비닐우산 등 사용 자제) ▲다회용품 사용 확대(다회용 컵, 장바구니 등 활용) ▲재활용 제품 사용 및 올바른 분리배출 등이 포함됐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공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플라스틱 등 석유 기반 제품 사용 절감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을 전사적으로 확대하며, 자원순환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공사는 또 청사 인근의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열리고 있는 '드림파크

벚꽃길 산책'(4월10일~19일) 기간에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단순한 사용 줄이기 수준을 넘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매립가스 발전 ▲음식물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 회수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한 자원순환 체계 등을 강화해, 에너지와 자원 위기에 대응하는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국제 원자재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전환과 국가적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국표원, '반려로봇' 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국가표준)

음성·얼굴인식, 위기상황 대응부터 배터리 과열, 내열성 등 안전성 점검 '시판품 조사'로 철저한 사후관리도

앞으로 반려동물처럼 사람과 교감하며 일상을 돕는 '반려로봇'에도 국가표준(KS) 인증 마크가 붙는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반려로봇을 국가표준(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KS 인증 체계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설계됐다. 단순히 로봇이 잘 움직이는지를 넘어 상호작용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음성이나 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 성능과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응 기능 등 기능적 성능은 물론, 배터리 과열 여부, 내열성, 내화성 등 안전성도 점검한다.

또 제품 성능에 그치지 않고 제조공장의 공정관리, 자재관리, 사후 서비스 대응(AS) 체계 등 기업의 품질 역량 전반을 검증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페스티벌 2026'에서 한 어린이가 '로보로스'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손하트를 만들고 있다. /뉴시스

이번 품목 지정에 따라 조만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인 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KS 인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법적 임의인증 제도지만, 인증 획득 시 제품 홍보와 정부 조달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증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판품 조사'를 통해 품질 저하가 발견될 경우 표시정지나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치

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국내 개인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양적 성장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KS 인증 도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반려로봇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권익위 권고로 순직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故 배종섭 씨, 18년 만에 명예 회복

가로등 보수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순직공무원 고(故) 배종섭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통해 사망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가족과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인은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08년 2월 29일, 전주시 강변로에서 고소 작업대 위에 올라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 지지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고인은 이튿날인 3월 1일,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40세의 젊은 나이에 순직했다.

특히 고인의 발인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치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전주시 완산구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국립묘지 '안장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가족의 재심의 신청에도 서류가 반송되는 등 고인의 명예는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 국가보훈부에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 보훈부가 이를 수용하며 마침내 고인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확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전윤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취임

5국3특 기반 균형발전 등 강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윤중 제6대 원장(사진)이 2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전 원장(사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부에서 통상·산업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으로 3년 넘게 재직했다.

기술혁신 정책, 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



화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전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 대응 ▲산업 인공지능전환(AI) 선도 ▲5국3특 기반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등 세 가지 사업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지원을 극대화하고, 국정과제를 철저히 완수하며,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식품부, '기본소득' 대상지 추가 선정

내달 중순 군 5곳 안팎 추가 예정

정부가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추진 중인 '기본소득'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사업 효과가 보인다는 판단 하에 적용 지역을 확대해 정책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郡)의 추가 선정을 위해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5월 중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군 5곳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위기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와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를 확산시키고 농어촌을 '머물고 돌아오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